

이란 핵협상 현황 및 전망

- 이란 핵문제는 2002년 이란의 반체제 단체 MKO(Mujahedin AL Khalq Organization)가 이란 중부 나탄츠 지역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폭로하면서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 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됨으로써 이란의 경제발전 및 교역확대를 위한 대외관계 형성에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
- 이후, 문제해결을 위하여 영국, 프랑스, 독일 등 EU국가가 서방을 대표하여 이란 측과 협상을 시작하였고 개혁파 성향의 하타미 정부 시절, 일시적이거나 자발적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.
- 그러나, 2005년 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강경보수 정부가 집권하면서 과거 정부의 핵정책을 굴욕적인 것으로 규정, 우라늄 농축중단 불가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핵 활동을 가속화해 온 바 있으며 서방측과의 협상 및 대응이 별다른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소강상태를 보여 왔음.
-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이란 측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압박이라는 병행 전략을 구사하여 2006년 12월, 2007년 3월, 2008년 3월 등 세 차례에 걸친 유엔의 경제제재 결의가 있었고 중간 중간 미국 및 EU의 단독 제재(주로 금융)조치가 시행된 바 있음.
- 2008년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사항인 소위 “미결 현안”에 관한 이란과 IAEA간의 협의가 있었으며 “alleged studies”라는 이란의 핵 무기화 의심 프로그램에 대한 서방측의 의혹제기가 있었음.
- 2009년 서방측은 “freeze for freeze” 구상을 이란 측에 제시하여 현재

까지도 이란과의 협상의 뼈대가 되고 있는 바, 이에 따르면 P5+1은 유엔 추가제재를 중지하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활동 확대를 중지하자는 것으로 서방측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우라늄 농축 중단(suspension)을 요구하던 종전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할 수 있음.

□ 2009년 미국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란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를 기대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음.

○ 미국은 이란과의 조건 없는 직접 대화를 천명하였고(이른 바 “7자 회담”), 이란도 4월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연설, NSC 성명을 통해 서방세계를 향한 새로운 핵문제 해결 패키지를 제시하겠다고 한 바 있음.

○ 특히, 이란 정부는 핵문제는 종결되었으며 IAEA이외의 어떠한 국가와도 핵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반대로 평화적 핵이용권을 저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에도 임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서방을 향한 이중적인(혼재된) 시그널을 보내왔음.

□ 현재 오바마 정부는 금년 말까지 핵협상에 상황에 대한 점점을 거쳐 향후 대이란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, 영국, 이스라엘, 국내의 공화당 보수파, 유대인 로비, 사우디 등 주변 아랍 국가의 반발 등을 의식하여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.

□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IAEA 사찰단의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사찰실시, 이란 보유 저농축 우라늄의 제3국 이전 가공, 핵시설 목적의 평화적 성격 여부 집중 조사 등 2009년 10. 1 이란 측과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.

○ P5 +1 국가들은 10. 1 합의안에 명시한 이란 우라늄의 제3국 반출 처리 방안을 수용키로 하고 이란 측의 최종 답변을 촉구한 상태임.

□ 그런 가운데, 최근 이란 측은 자국 보유 저농축 우라늄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반출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협상안에 대해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최종 입장 표명을 보류중임.

-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이란과 서방측과의 핵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는 있으나 우라늄의 제3국 이전 처리방식과 이전량을 둘러싼 이란 내 강경보수 세력의 반대가 심해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임.

- 이란 내 보수 세력은 서방측과 합의한 대로, 자국 보유 저농축 우라늄의 대부분을 대외로 반출할 경우 대서방 협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협상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,

- 이란 측은 테헤란 내 의료용 원자로 작동에 필요한 우라늄(순도 20%) 농축에 소요될 정도 규모의 우라늄 반출을 협상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함.

<이란주재원 제공>